주간브리프
WEEKLY ISSUE BRIEF 2025. 7. 7.
Vol. 26

농식품부, 여름철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

- 2025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.6% 상승하여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.
  - 다만, 향후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.
  -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0.9% 하락
-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배추, 무, 양파 등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.8% 하락(전월 대비 2.4% 하락)하였음.
  - 마늘은 '24년 재고 감소에 따라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, '25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.6%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
  - 시설채소는 6월 초·중순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부진에 따른 수급 불안이 있었음. 하지만, 최근 일조량 상승과 함께 생육이 회복 중에 있어 앞으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
  - 과일류는 '24년보다 저장량이 많고 '25년산 작황도 평년과 비슷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.3% 상승(전월 대비 1.3% 상승)하였음.
  - 한우 공급량은 '25년 상반기 기준 458천 마리로 평년(409천 마리) 보다 많은 상황
  - 국산 돼지 도축 마릿수는 '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.6%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 2.1% 증가 전망
  - 계란은 '25년 3~5월 병아리 입식 증가('24년 평균 대비 9.2% 증가)로 인해 9월 이후에는 생산량 증가 예상
-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커피, 코코아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, 에너지 비용 등 기업의 경영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.6% 상승하였음.
  - 최근 팜유,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- 외식 부문 소비자물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, 인건비, 배달 수수료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하였음.

▌품목·부문별 수급안정 대책▐

농산물	1) 배추 정부가용물량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운용 계획 2) 현장 기술지원 강화 3) 영양제·약제 지원
축산물	1) 태국산 닭고기 7월말부터 수입 2) 브라질 내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 닭고기 8월 중순부터 수입 3)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한우·한돈 할인지원사업
가공식품 부문	1)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('25.6.30→12.31): 으깬파인애플, 으깬감귤류, 과일칵테일, 기타단일과실주스 2) 할당관세 물량 확대: 과일칵테일(5→7천 톤), 계란가공품(4→10천 톤) 3) 국산농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(+200억 원)
외식 부문	1)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2)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3)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4)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: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 지급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 ('25.07.02)

세계 경제 동향

◎ 중국 제조업 3개월 연속 위축 ▌2025-06-30 중국국가통계국; 한겨레, 2025-07-01미국공급관리협회

- 2025년 6월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*가 전월보다 0.2p 상승한 49.70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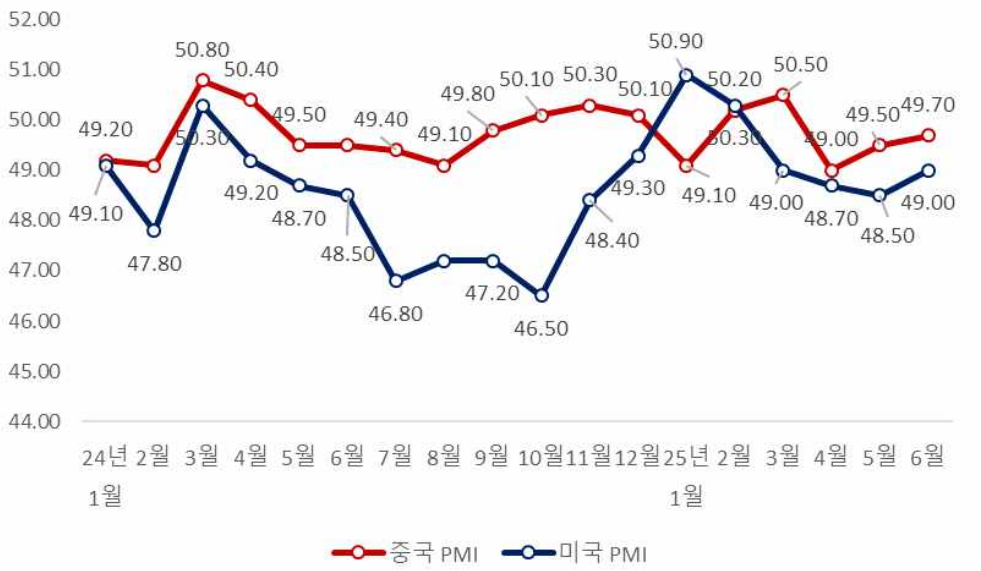
  *구매자관리지수(Purchasing Managers' Index, PMI)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, 생산, 고용, 원자재 공급, 재고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됨. 기준값 50을 중심으로,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,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함.

  - 미·중 관세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, '25년 4월부터 6월까지 PMI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(49.0→49.5→49.7), 여전히 기준값 50 아래에 머물러 있어 경기 위축 상황임을 시사함.
  - 중국 정부는 '25년 3월 '소비 진흥 특별 행동 방안' 등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음. 또한, '25년 5월에는 7개월 동안 동결해 왔던 대출우대금리(LPR)를 0.1%p 낮추는 등 통화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. (주간브리프 Vol. 25)

- 참고로, '25년 7월 1일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는 6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.5p 상승한 49.0을 발표하였음.
  - 미국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기준값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냄.
  -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미국 제조업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.

❖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머무르는 가운데, 대미·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로 수출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. 지속적인 경기 모니터링과 신시장 개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▌2024~25년 6월 중국·미국 구매관리자지수(PMI) 추이 ▌



국내 경제 동향

6월 소비자물가 2.2% 상승 ▌2025-07-02 통계청; 기획재정부

- 2025년 7월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.2%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.
  - 전월 1.9%보다 0.3%p 상승 (주간브리프 Vol. 22)
- 품목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기·가스·수도(3.1%), 개인서비스(3.3%)의 물가상승률*이 높았고, 공공서비스(1.2%), 농축수산물(1.5%)의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낮았음.

  *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
  - (농축수산물)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.8% 하락함. 반면,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4.3%, 7.4% 상승하여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을 상승시킴.
  - (공업제품)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.3% 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 0.4% 하락함.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.6% 상승하며, 지난 4월 4.1%, 5월 4.1%에 이어 석달 연속 4%대를 기록.
  - (개인서비스)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하였으며, 외식을 제외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.5% 상승
- '25년 7월 2일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 파악,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설정,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였음.
  -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물가안정 관련 사업 신속 집행 추진
  -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리, 원예, 축산 등 사전점검 실시 계획
  - 국내외 에너지가격·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예정
  - 7월 1일~8월 31일간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, 숙박요금, 피서용품 이용요금 집중 관리 계획

▌2024~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▌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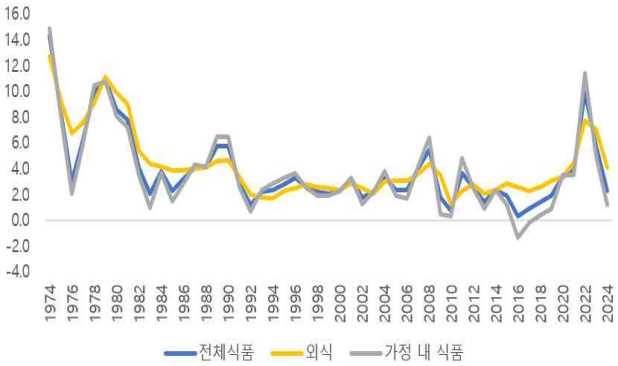
○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 2025년 식품 가격 전망 발표 ▌2025-06-25 미국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

-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(USDA-ERS)은 2025년 식품 가격 전망을 발표함. 2025년 식품 물가 상승률은 2.9% 수준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9.9%에서 2023년 5.8%, 2024년 2.3%로 둔화되었고, 2025년에는 2.9%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. 이는 과거 20년 평균(약 2.6%)과 유사한 수준
  - 가정 내 식료품 물가는 2024년 1.2%, 2025년 2.2% 상승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  - 반면 외식 물가상승률은 2024년 4.1%, 2025년 3.9%로 높게 유지돼 소비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- 품목별로는 가격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고 있으며, 특히 축산물 부문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큰 편임.
  -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영향으로 2024년 41.5%, 2025년에도 33.2% 상승할 것으로 예상
  - 소고기와 송아지고기는 가축 수 감소와 사료비 상승으로 각각 2024년 8.6%, 2025년 6.8% 상승할 것으로 전망
  - 반면 신선 채소는 2.5%, 유제품은 0.2% 하락이 예상돼 일부 품목에서 가격 부담 완화 가능성 있음.
- 생산자물가지수(PPI)*는 품목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.
  - 농가 수취의 경우, 계란은 전년 대비 65.2%, 소고기는 17.3% 상승
  - 반면, 우유는 전년 대비 12.5%, 채소 20.4%, 과일 16.0%, 밀 25.6% 하락 전망됨. 주요 품목의 생산자 가격 하락은 일부 식품의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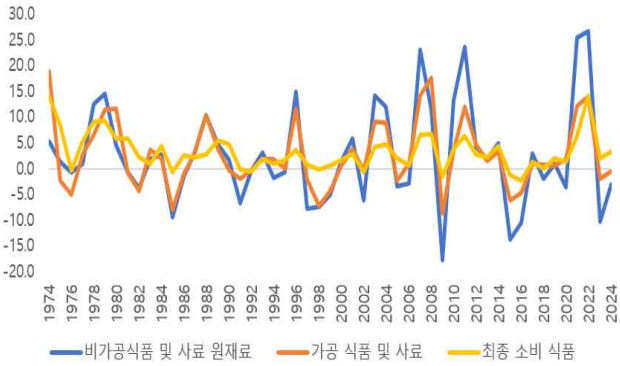
  *향후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지표
- USDA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외식비 상승, 축산물 공급 불안, 기후·질병 리스크 등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며,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
  - 특히 저소득층은 식품 물가에 더 취약함. 2023년 기준 하위 20% 가구는 세후소득의 32.6%를 식비로 지출한 반면, 상위 20%는 8.1%에 불과
  - USDA는 매월 물가 전망과 소비 지표를 갱신하고 있으며, 이를 소비자 정책, 식품 지원, 농업 보조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

▌미국 식품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연간 변동률 (1974~2024) ▌

미국 식품 소비자물가지수



미국 식품 생산자물가지수



일본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변경 ▌2025-06-27 농림수산성

- 농림수산성은 「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위임된 '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'을 변경하여 2025년 6월 27일 관보에 게재함.
  - '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'은 토양 비옥도, 수리 조건, 일조량 등이 양호하여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한 고품질 우량 농지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
  -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법정 지침으로, 2024년 6월 관련 법 개정과 2025년 4월 '식량·농업·농촌 기본계획'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임.
- 이번 변경안에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용지 확보의 기본 방향과 함께,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농지 면적 목표가 명시됨.
  - 국토 보전, 수원 함양,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, 농촌 문화 유지 등 농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본 인식 추가
  - 국가 차원 농용지 확보 목표를 2035년까지 390만 ha로 설정(2023년 기준 396.7만 ha 대비 조정)
  - 이에 따라 각 도도부현은 2023년을 기준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, 최근의 농지 감소 추세, 식량 생산력, 인구 및 지형 여건, 지역 농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농지 확보 목표 산정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발표 ▌2025-06-26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등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.
  - 농업기계 보유 현황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,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년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
  -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기준이며, 주요 16종의 농업기계와 폐기 기계를 대상으로 진행
  -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한 교육용 농업기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
- 2024년 기준 주요 농업기계 16종의 보유 대수는 총 197만 8천 대로, 전년 대비 0.7% 증가함. 총 농기계 보유 대수는 최근 수년간 190만 대 수준을 유지 중임.
  - 동력경운기(51.6만 대), 관리기(46.3만 대), 트랙터(31.6만 대), 농산물 건조기(24.9만 대) 순
  - 밭농업 기계화 확대에 따른 파종기, 정식기, 관리기,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의 증가
  -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콤바인, 이앙기, 경운기 등의 감소
- 농업기계 보유 추세는 품목별로 차이가 뚜렷하며, 소형기계 전동화와 친환경 기계 보급이 확대되는 양상임.
  - 2014년 대비 트랙터 13.9%, 관리기 16.8%, 스피드스프레이어 34% 증가
  - 2019년 이후 조사 대상에 포함된 파종기, 정식기, 수확기 각각 68.1%, 70.3%, 60% 증가
  - 2022년 이후 포함된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인 고소작업차 146%, 동력운반차 183%, 주행형 방제기 224% 증가
- 폐기된 농업기계는 전년(1만 2,431대)보다 줄어든 1만 973대로 집계됨.
  - 전체 폐기 대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종은 동력경운기, 관리기, 트랙터
  - 고령화와 농촌 인력 감소에 따라 일부 기종은 신규 대체 없이 폐기 진행
-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.
  - 밭농업 중심 기계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
  - 친환경·스마트농업 전환을 고려한 기계 보급 정책 마련

▌주요 농업기계 보유 대수(2011~2024) ▌

단위 : 천 대

